

TSMC 주문 포화... 삼성전자, 생산거점 확대로 '승부수'

TSMC, 2028년까지 주문예약 마감 삼성전자, 美 파운드리 공장 건설 P4 팹·P5 공장, 계획보다 앞당겨 우호적 환경, 수주 성과 연결 위해 수율·공정 안정성 지속 입증해야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글로벌 1위 파운드리 업체 TSMC를 중심으로 공급 병목 현상이 심화되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반사이익을 거둘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2나노(nm·10억분의 1m) 이하 첨단 공정을 동시에 수용할 복합 생산기지 구축에 속도를 내며 수요 흡수 기반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29일 대만 현지 매체 및 업계에 따르면 TSMC는 2028년까지 모든 주문 예약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빅테크 기업들의 폭발적인 수요가 몰리면서 생산 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만 경제일보는 TSMC의 2나노 생산능력이 심각한 공급 부족 상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최대 고객인 엔비디아도 충분한 물량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2030년 양산 목표를 둔 미국 애리조나 4공장

역시 착공 전임에도 이미 예약이 상당 부분 선점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브로드컴은 지난 24일 TSMC를 두고 더 이상 무한대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26년 내내 공급 병목이 이

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빅테크들의 주문이 삼성전자로 몰릴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2나노 선단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파운드리 업체는 TSMC와 삼성전자 두 곳에 불과하다. 그간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율 문제로 대형 수주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2나노 공정 수율을 60% 이상 끌어올리며 빅테크 고객 유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 파운드리는 국내의 생산 거점 확대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회사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약 370억달러(한화 약 53조 4000억원)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테일러팹1은 빠른 시간내에 시생산과 램프업을 거쳐 하반기에 본격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메모리 생산능력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팹팹 퍼스내 P4 팹은 당초 내년 1분기 준공이 예상됐으나 이를 올해 4분기로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P4에서는 고성능 메모리 생산이 이뤄질 전망이며 최근에는 고대역폭메모

리(HBM)에 적용되는 10나노 6세대(1c) D램 생산라인 구축 전략도 수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라인에서는 월 10만~12만장의 웨이퍼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팹팹 P5 공장 또한 당초 계획보다 장비 반입과 시험 가동을 위한 일정을 조율하는 단계로 전해진다. 해당 공장은 삼성전자 최초의 트리플 팹(3층 구조)으로 총 12개의 클린룸으로 구성된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러한 우호적 환경을 실제 수주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수율과 공정 안정성을 지속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테슬라 등 기존 고객사의 물량을 차질 없이 생산하며 시장 신뢰를 확고히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미국 테일러 공장은 단순 증설이 아니라 글로벌 고객을 현지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라며 "초기 수율과 공정 안정성이 확보될 경우 TSMC에 집중된 수요를 일부 흡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NH투자증권

IMA사업자지정

기대하세요 N2, IMA1

※ IMA란 (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종합투자계좌)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대형 증권사만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만기보유 시 원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실적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NH투자증권

제네릭·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 하향 수익성 악화에 악순환 우려

현행 53.55% → 45% 수준으로 하향 국내 제약, 사업·신약개발 주체 동일 채산성 하락, 의약품 생산 중단 예고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 의존도를 낮추고 혁신 신약 중심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강공책을 꺼내 들었지만, 제약 업계에서는 신약개발 활성화보다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연구개발(R&D) 축소, 고용 감소, 소비자 부담 가중 등 '제약산업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네릭 의약품 및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약가제도 개선안이 통과됐다.

복지부는 제약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부터 오는 2036년까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연구 활동과 신약 개발을 이어가는 기업을 중심으로 완충 장치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혁신형 제약 기업'과 '준혁신형 제약 기업'에는 일반 약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특례 약가를 적용해 우대해 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혁신형 기업에는 49%, 준혁신형 기업에는 47%의 약가 산정률을 도입한다. 특례 기간도 혁신형 기업 4년, 준혁신형 기업 3년 등으로 차등 부여한다.

하지만 제약 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현장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전했다.

제네릭 의약품은 국내 제약 기업의 주요 매출 창출원인 동시에 신약 개발 재원이다. 제네릭 의약품 사업 주체와 신약개발 주체가 동일한 국내 제약 산업의 특수

성에 따라, 이번 약가 인하는 연구개발 투자 여력 약화, 산업 혁신 동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채산성 하락, 의약품 생산 중단 등의 악순환이 예고됐다. 최근 들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원제약의 신경안정제 '대원디아제팜정 2mg', 명인제약의 정신분열증 치료제 '명인피모지정 4mg' 등의 공급 중단 계획이 보고됐다. 두 회사 모두 원료 및 생산 가격 상승과 약가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 약제비 부담이 발생하는 역설적 상황도 짚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보고서 25호에 따르면,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이후 2013년 13조2000억원이었던 국내 약제비는 2022년 22조9000억원으로 10년 사이 약 73.5% 급증한 바 있다.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복지부 결정으로 제약 산업 생태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며 "정부는 국민건강, 보험재정, 산업 경쟁력을 모두 아우르고, 국제정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유연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사후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가동될 민관협의체를 통해 ▲CSO(의약품판매총업자) 등 유통구조 개선 ▲제네릭 활성화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의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100원짜리 약을 85원으로 깎았더니 마진 이슈로 아예 생산이 중단되고 환자는 대체제로 200원, 500원 등 고가 수입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nlee236@



metro